



나라살림
가족살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요일도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여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혼선도 있었지만 대단한 의욕과 노력을 보여준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소신을 반영해서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새 집권세력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려고 무리한 경제운용을 하다가 부작용을 낳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특히 1970년대 건설 신화의 주인공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알게 모르게 박정희식 경제 패러다임이 들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도 있지만, 인수위의 활동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청와대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관심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경제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박정희식 모델이다. 그러

박정희식 모델이 부활하는가?

나 이런 조직개편은 권한 축소에 따른 일선 경제부처의 무력화나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과 물적 투자를 성장의 축으로 하고 정부 주도형 발전을 추구했던 박정희 시대에는 청와대의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했는지 몰라도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혁신과 인적 투자 중심의 성장을 이루는 데는 합리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과 원칙 있는 국정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도 과거 회귀의 냄새가 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08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 후 한나라당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인데 그 특징은 복지지출의 삭감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이것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복지지출은 형편없이 낮고 반면에 건설투자는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의 허술함과 미흡함은 일상에서 절감하는 바이며, 쓸데없이 만들어 났다 싶은 도로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쉽게 눈에 띈다. 이제는 시멘트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사고할 때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식 관치경제의 습성

이 엿보이는 일들이 있었다. 말로는 민간 주도요 시장경제를 주장하는데, 조속히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관치경제적인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 같다. 통신요금을 20% 인하하라는 인수위의 요구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경영행위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것이 좋은 예다. 당선인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고, 총수들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하는 것도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모습은 아니다. 더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 주요 그룹들을 상대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상세히 파악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국정원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거니와 이것이 이명박식 관치경제의 조짐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확정했다고 한다. 객관적인 경제성 검토와 여론수렴에는 관심이 없고 밀어붙이기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중심의 강한 추진력을 내세우는 정부, 복지는 뒤로 미루고 건설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 민의와 시장원리를 중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의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습을 예감케 한다. 개발 초기단계에나 적합했던 박정희식 모델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기고

여성가족부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

신혜수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개편안을 보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 대상으로 꼽히는 데 대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은 성평등 문제를 유엔 전체의 공통의 문제(cross-cutting issue)로 설정하고, 유엔 회원국 모두가 성평등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심의를 받았다. 심의 결과 호주제 폐지 등 법과 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도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이 증대된 것 등에 대해 많은 칭찬과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이 빈곤국에서 상위 중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여성 부문의 발전은 민주주의·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나는 선출직인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8년째 하

고 있다. 그동안 137개국이 제출한 159건의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각 나라의 다양한 여성정책과 여성전담부서를 살펴보고 심의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나의 주된 일이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여성정책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 또는 80년대 초에 이미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계속 이를 개정·강화해 왔으며, 성평등 문제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차별을 없애고자 계속 노력하는 것은 경제분야에서 차별, 특히 임금격차와 성희롱 문제, 공직에 대한 동등한 참여 보장,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문제다.

그 결과 이런 선진국들은 성평등 정책이 모든 부처로 주류화되어 한 부처에서만 여성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이룩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인간개발지수, 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가 모두 높은 나라들이다. 이 세 부문에서 모두 10위 안에 드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의 6개국으로,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장 힘센 나라로 간주되는 미국은 인간개발지수는 12위, 여성개발지수는 16위, 여성권한척도는 15위이고, 경제력으로 둘째로 꼽히는 일본은 인간개발지수는 8위이지만, 여성개발지수는 13위, 여성권한척도는 54위로 처져 있다.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와 여성개발지수 모두 26위, 여성권한척도는 64위로 하위권이다.

새 정부는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이다. 여자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낳고서도 눈치보지 않고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출산·보육정책이 잘되어 있는 사회, 직장에서 임금차별·성희롱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여성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높은 자리까지 진출해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할 때만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구의 반인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성평등 문제가 모든 부처의 중요업무로 포함되어 주류화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는 존속되어야 하고,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